

라운드테이블

---

#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 참여사회연구소

## 프로그램

### 사회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 인사말씀

홍윤기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동국대학교 교수

### 패널 및 주제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6·4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말하는 것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더 좋은 미래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마을에서 바라본 고민과 바람 / 백해영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 목차

- 04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하승수
- 08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 이태호
- 15 6·4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말하는 것 / 은수미
- 25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이철희
- 29 마을에서 바라본 고민과 바람 / 백해영

##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 1. 세월호와 지방선거 평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일부 유권자들이 여당심판이라는 생각에 투표에 참여했다. 그 최대 수혜자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그러나 경기, 인천의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견고한 지지가 이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어느 정도로 투표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표심리의 발동’, 세월호 참사 직후 한달 가까이 선거운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했다.

세월호 참사의 라는 거대한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투영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안전’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선거의 핵심쟁점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분노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되고 그것이 선거쟁점화되어 투표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이후의 과제로 넘겨진 셈이라고 본다.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거대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양성과 함께 건강성을 박탈해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론이 판치게 되었다. 부패, 이권, 무능, 무책임이라는 단어가 정치를 지배하

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측면의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 2. 세월호와 진보

**2-1> 세월호가 고장난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면, 기존의 정치권, 사회세력 (특히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정당운동)이 성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운동이 자신들의 분노를 담아내거나 대변할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나 정당운동이 제대로 진단해 오지도 못했고, 제대로 대처해 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를 생각한다.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탈출’을 생각하는 것이다.

운동의 기본적인 역할은 분노를 조직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운동은 시민사회든 정당이든 터지는 이슈를 따라가기에 바쁜 상황이다.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물신주의, 경제성장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찾잔속의 미풍’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 정치시스템은 견고하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녹색당, 진보정당, 시민사회운동 모두 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는 역량은 취약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무엇이 진보인지?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보인가? 그 복지를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에 동조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인가? 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유지하고,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에 쓰겠다는 사고가 진보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이제는 답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보수라는 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보-보수 프레임이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도 생각해 봐야 한다.

## **2-2>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결국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한다(혹은 시민사회가 답이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오구마 에이치라는 일본 학자가 쓴 ‘사회를 바꾸려면’이라는 책을 보니, 일본 사회운동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들이 총리관저를 둘러싸는 사건들이 있으면서 운동의 주체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 있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시민사회=시민단체가 아니다. 시민단체에 회원가입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본다.

저는 몇 명이 모이는 다양한 모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어린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다. 돌 전후의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10여명 모여서 세월호에 대해 얘기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는 것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정당운동의 역할은 이런 모임들을 연결하여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정치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다. 마당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마당의 주인은 ‘분노한 시민’이어야 한다.

## **2-3> 이와 관련, 진보개혁적 운동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다양한 행위주체와 활동영역의 발굴 등), 그리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혹은 개척해야 할 활동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활동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질문 자체를 바꾸면 좋겠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도 모호한데, ‘진보개혁’은 더 모호한 것 같다. 그냥 ‘운동’이라고 하면 좋겠다.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운동이고, 어떤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따라 운동도 나뉘질 것이다. 그냥 뭉뚱그려서 ‘진보개혁’이라고 하는 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민사회운동이든 정당운동이든 ‘참여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방향이나 초점은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뿐만 아니라 방식도 다양하면 좋겠다.

운동이 다양하게 발전할 때, 누가 그것을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진정성있게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

한다. 참여연대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어떤 영역을 활동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활동방식을 바꾸려고 하는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조직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녹색당은 한국사회가 ‘탈성장’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성장주의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근본원인이라고 믿는다. 탈성장은 탈핵, 탈토건, 탈위험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그래서 녹색당은 ‘경제성장을 국가의 목표’에서 지우고 1인당GDP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산업활동에 일정정도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원전, 초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녹색당의 역할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풀뿌리에 기반해야 하고,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녹색당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이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실천들도 많다.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녹색당원들은 협동조합도 만들고 태양광발전도 시도하고 텃밭도 가꾼다. ‘삶이 정치’라는 것을 직접 실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지를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생산적이다.

그렇지 않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평론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토론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세월호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004년 재선에 성공한 것은 적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부시 미 대통령과 네오콘 주도의 공화당은 2000년 대선에서 가까스로 신승(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전체득표수에서는 졌고 선거인단 수에서 이긴 것)을 거두었지만, 곧 911라는 안보위기를 대테러 전쟁으로 연결시키면서 안정적 지지층을 확보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비판적 여론이 강해졌지만,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기회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멘붕’이었다. 침공 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라크엔 대량살상무기가 없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세력과의 연계 흔적도 없다고 인정했지만, 당시 여론조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수가 여전히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테러와 협력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의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보수진영은 철옹성같아 보였다.

그러나 2기 부시 행정부는 집권 직후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의 국내외 인권침해 논란, 천문학적인 전비와 경제침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반전시위 등에 의해 공격받다가, 2006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즈 침수사태를 계기로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이후 사실상 레임덕에 가까운 추락을 경험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소모적이고 비인도적인 전쟁을

지속하는데 인력과 재정을 소모한 결과 정부가 정작 재난을 예방하거나 자국민을 지켜내는데 무관심하고 무능력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911과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민들은 한층 심화된 자유에 대한 통제와 인권의 후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적지 않은 미국민들이 국가가 해야 할 중에는 목표도 알기 힘든 전쟁을 치르거나 시장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미국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안보 국가의 모습, 시민들이 궁핍으로부터도 공포로부터도 전혀 자유롭지 않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후 극단적인 진영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정치적 의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전후의 한국사회는 여러 면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전후의 미국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의 보수정부는 한편에서는 강력한 안보논리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같은 불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와 안전 같은 현실타개적 정책공약을 내세우면서 2012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 대선 이후 보수정부는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보수언론과 진영화, 그리고 이전 보수정부보다는 덜 거칠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군사안보 위주의 대외정책 등에 힘입어 그럭저럭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대선시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으로, 복지와 안전은 규제개혁과 민영화/영리화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갔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나 이념편향적 집체안보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주로 국제기준에 반하는 노조파괴의 논리로 악용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을 강조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쳐부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거의 모든 사고예방체계, 구조구난체계가 약속이나 한듯이 작동하지 않았고, 혼란에 휩싸였다. 뒤늦게 가동되고 동원되기 시작한 조직과 장비도 형편없이 낙후한 것이었다. 반면, 전국민들은 첨단통신장비를 통해 수많은 목숨들이 시시각각으로 속절없이 스러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연 34조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나라의 납세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서 잠수사들이 쇠작대기 하나만 들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아야 했다.

헌신적인 소수를 제외한 선장과 다수의 선박직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면서 승

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거듭 지시하여 구할 수 있는 많은 목숨을 잃게 했다. 비윤절감과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업체는 선장마저도 비정규직을 고용했고, 정부 정책으로 보장된 각종 규제완화와 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가 업체의 이러한 부도덕한 이윤추구를 용인하고 사실상 권장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특정 종교집단에 기반을 둔 특정 기업의 비정상적인 행위의 산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 기간 중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건 구조구난 실패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컨트롤 타워에는 여전히 자신과 청와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지적했지만 사고 당일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무관심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무능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청탁금지제도(김영란법) 등의 공직사회 혁신 방안과 탐욕적 사익추구행위 배상책임 방안 등 제시했다. 몇몇 반부패 대안들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왔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는 시민이 스스로 공권력과 기업의 횡포와 부정부패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법 상 배임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노동법 등의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하자면 검찰이 쫓고 있는 유병언 회장의 배임 횡령에 대한 직원들의 공익신고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 민관유착 근절 등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 관료나 국가권력, 자본 등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는데는 큰 관심이 없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범국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

고 토론되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이는 '땀질식 처방'은 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다짐과도 상반된다.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마친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 공약을 밝히는 대신 해외원전수출 기념식에 참여했다.

특이할만한 것은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규제완화였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집요한 추구가 소름끼칠 정도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약 한달 전인 지난 3월 19일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 해양 환경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었다<sup>1)</sup>.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보상특별법, 여야민간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특검 등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장, 일부승무원, 업체' 등에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 정죄한 후에, 각종 재발방지대책들마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발표하는 것과 국민참여형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유가족의 참여 아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양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내내 부정적 평가를 얻었다.

### 3. 막말 속에 드러난 권력층의 인식의 편린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말끝마다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정부,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콘트롤하는 데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통제하고 콘트롤 하는 데는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비쳐졌다.

1) “첫째로 국토·해양·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제도약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규제 개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2014. 3. 19.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9909](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9909)

나라사랑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미국 국민들은 단결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보훈처장은 세월호 재난구조를 위해 정부기관이 단결하지 못한 것, 정작 위기 시에 단결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제자리를 지킨 어린 아이들을 정부는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함구했다. 911 당시 미국 소방대원 300여명이 희생당한 것에 비해 해경은 단 한명이라도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지 않았었다. 한편, 911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반전시위가 있었고, 테러의 위협 때문에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이어졌었다.

재벌가문인 정몽준 의원의 아들은 “국민이 미개하니 국가가 미개한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아직 고등학생이니 그런 글을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몽준 의원의 아들의 우연한 말실수라고 볼수만은 없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과 조타수들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때에만 “국민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훈육하려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의 조광작 부회장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어째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지탄을 받았다.

이런 망언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대해 특권층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여당은 세월호 참사 내내 쏟아진 비판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보수층을 어느 정도 응집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권의 한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야당 집권 시절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국시처럼 받아들여졌었다. 현재와 같은 비인

간적이고 경제효율 중심의 사회구조를 고착시킨 책임에서 과거 이른바 민주정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난 등 위기관리체제가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시에 도 대구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 등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힘들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 특권층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지향은 비교적 명확하고 집요하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안보국가, 시장이 자유화된 통제사회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국가를 통한 공공성의 실현, 혹은 군사안보 논리와 흡스식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시민안전과 사회보장,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로의 전환이 대안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야당이 복지나 안전,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행복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우선순위의 신뢰할만한 대변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진보정당의 한계 역시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해졌다. 통합진보당의 낙후한 자주노선과 일부 당원들의 시대착오적 경향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책임론을 주장했으나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다른 진보정당들은 진보당만한 조직력을 갖지 못했고 진보당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조직 위에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결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삼척시장 선거결과다. 삼척시장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원전건설 백지화’를 내세웠던 무소속 김양호 당선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현직 찬성파 시장에게 14% 이상 열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핵’을 내세운 선거운동 결과 현 시장을 9000표 이상의 큰 표차로 따돌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에너지의 일단을 이 투표결과가 보여준다.

17개 광역 중 13개를 민주진보 계열이 휩쓴 교육감 선거결과도 눈에 띈다. 보수의 자만과 분열로 인한 어부지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해진 질서에 순응하도록 군사주의적으로 훈육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른바 앵그리맘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내용과 주체,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야권의 정권책임론 혹은 심판론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왔고 결과적으로도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드러났었다. 반면, 조용한 선거, 그리고 실질적인 우선순위의 변화를 일부나마 실천한 후보의 경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도 그 예이다.

## 5. 재난자본주의 vs. 세월호 이후의 정치/사회운동

박근혜 정부 식의 일방적 독주, 국민과의 소통없는 공작적 통치행태가 큰 변함없이 지속될 경우, 보수정부도 집권기간 내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범여권 내에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넘어설 ‘보수적 개혁’의 리더십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대체로 자신들만의 낙후한 특권의식과 편견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민주진보 진영도 자만할 수 없다.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저서 ‘쇼크 독트린’에서 재난과 위기를 계기로 도리어 새로운 자본 지배질서가 들어서곤 한다는 분석적 주장을 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윤추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는 신뢰를 잃었고, 우리사회의 신뢰적자는 더욱 심화되었다.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국가를 통해 공공적 가치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과거보다 더 회의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위기가 단지 현정부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공공성)의 위기일 수 있다. 더욱이 거대자본과 특권층이 규제완화, 민영화, 영리화를 일관되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조건에서 이후의 상황이 반드시 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민주진보 세력은 어깨에 힘을 빼고 권력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공공성의 실현, 일상과 마을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안전, 행복에 확고한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사회조직을 차근차근 집요하게 건설해가야 한다. ㉠

## 6.4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말하는 것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더 좋은 미래

이번 선거는 야당이 지기 어려운 선거였다.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데다가, 선거 직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초상치를 줄 알았는데 환갑잔치 하게 생겼다”는 새누리당 모 당직자의 말처럼 정부여당은 선방했고 “야당은 사실상 실패한 선거”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진다는 신호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즉 “야당은 지는 운명” 혹은 “실패의 구조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영화 <말레피센트>에서 마녀 말레피센트는 갓 태어난 오로라 공주가 16살이 되면 물레바늘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고 예언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향후 선거가 지는 선거라고 말하는 마녀 말레피센트이다. 물론 마녀는 그 운명이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즉 진정한 사랑의 키스에 의해서만 바뀐다고도 했다. 지는 선거를 바꾸려면, 시민이 야당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진정한 사랑의 키스, 즉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과 민주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시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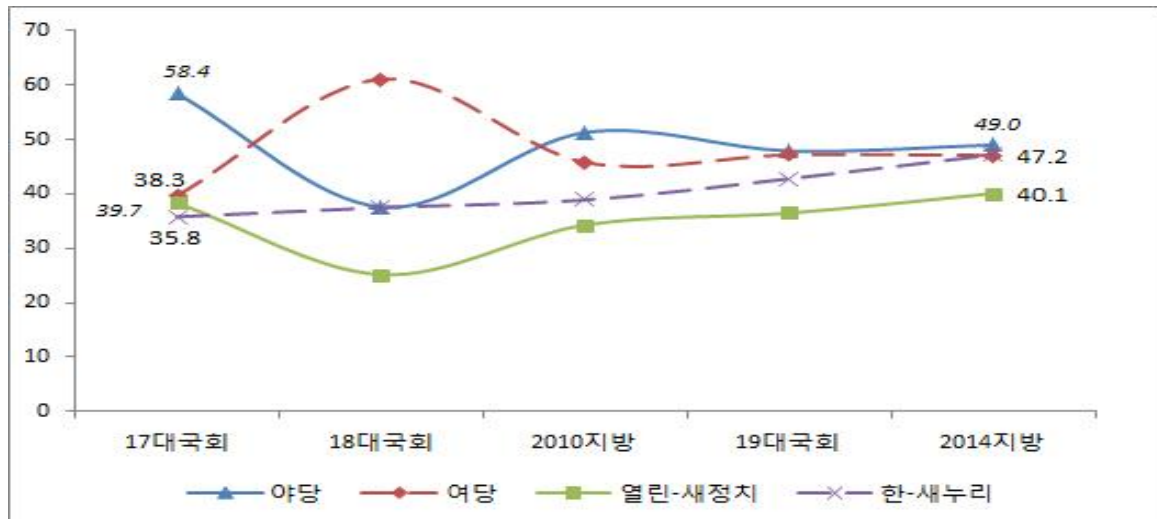
세월호 시민의 힘은 유리한 외부환경이고, 선전할 수 있는 후보군의 존재는 또 다른 가능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이 지지하도록 만들거나 이기는 선거나 집권은 안된다. 때문에 이 글을 쓴다. 지방선거가 말하고 있는 바, 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단호한 변화를 시작하여 공주를 깨우고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1. 당득표율(지지율)<sup>2)</sup>은 제자리 걸음, 전체 야권의 지지율은 하락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상승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35.8%에서 2014년 지방선거 47.2%로 약 11.4% 올랐다. 이것은 여권 전체 지지율과 거의 같은 수치이며 ‘신보수대연합’을 뜻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지난 15년간 38~40% 사이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38.3%였고 새천년민주당까지 합하면 45.4%이다.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0.1%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얻은 야당의 성적표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림 1) 선거 시기별 당지지율(득표율): 여야 비교



주: 1. 당득표율(지지율)은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비례득표율, 국회의원선거는 정당투표율  
2. 정당득표율 중 해당지역에서 1% 미만의 지지는 포함시키지 않음

게다가 야권 전체 지지율은 58.4%에서 49.0%로 뚜렷하게 줄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시기 평균적으로 야권표의 80% 내외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야권 전체 지지율의 하락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첫째,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성공하고 있어서 후보가 바뀌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2) 여기서 당 지지율은 광역비례 득표율을 환산한 것이다. 때문에 당 득표율을 당지지율로 사용하겠다.

아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신보수연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지지율만이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승리가 박근혜대통령의 인기때문일까?

물론 충청권의 이반과 같은 불안한 요인은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야당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이반마저도 후보의 승리일수는 있지만 야당의 승리는 아닌 탓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보다 적절한 후보를 찾는다면 구도는 바뀐다.

둘째, 투표 연령층 구성변화(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노령화 정도라면 선진국에서도 꽤 뚜렷하다. 이것이 맞다면 선진국에서는 모두 보수일색이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연령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꽤 많다. 이 점은 향후에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 2. 후보의 선전은 양날의 칼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 당지지율 보다 10%가 넘는 득표력을 보이며 선전 했다. 새정치연합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총 17명 중 13명이 당 지지율보다 높고, 당지지율을 평균 10.6% 상회하는 득표력을 가졌다. 반면 새누리 후보들은 당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력을 보인 후보가 8명이며 이들은 당지지율보다 평균 5.1% 높은 득표력에 그친다.

당지지율을 상회하는 득표력을 보인 후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김부겸(대구) 17.1%, 최문순(강원도) 16.2%, 안희정(충남) 15.3%, 이낙연(전남) 14.3%, 이시종(충북) 12.1%, 박원순(서울) 11.5% 등 총 6명이다. 뒤이어 송하진(전북) 9.0%, 김경수(경남) 8.1%, 송영길(인천) 8.1%로 당지지율을 상회했다.

특히 강원도 최문순 후보는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없는 지역에서 당선되었고, 김부겸 후보는 당지지율이 23.2%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것의 두 배 가까운 득표력을 보였으며, 김경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지만 36%의 득표를 했다.

그림 2) 당선자 지지율과 당 지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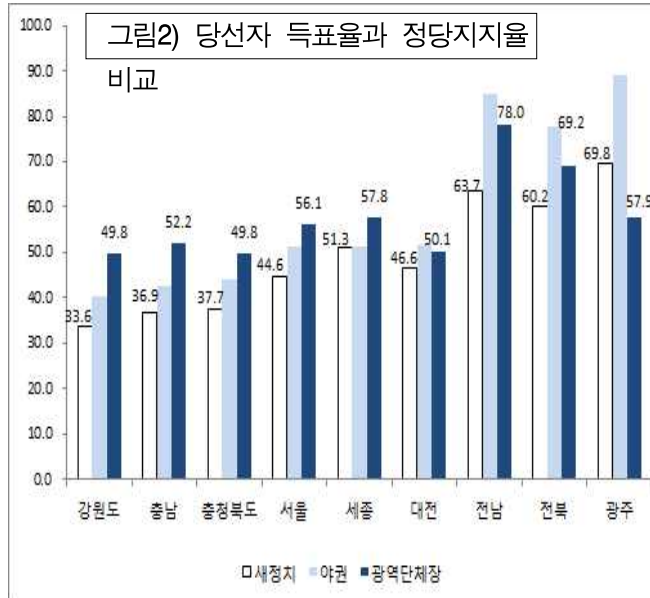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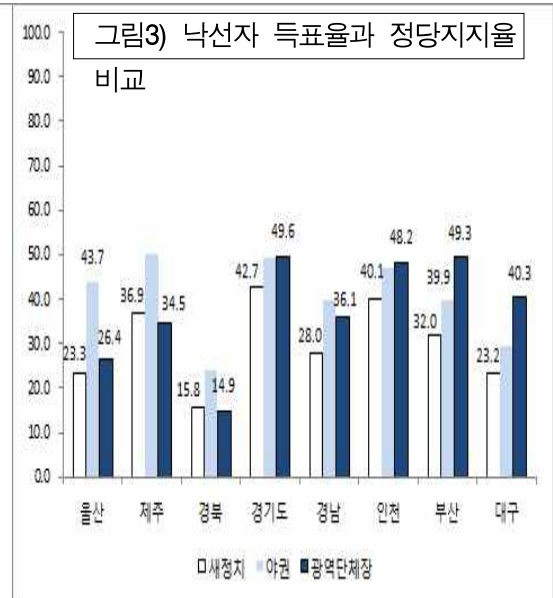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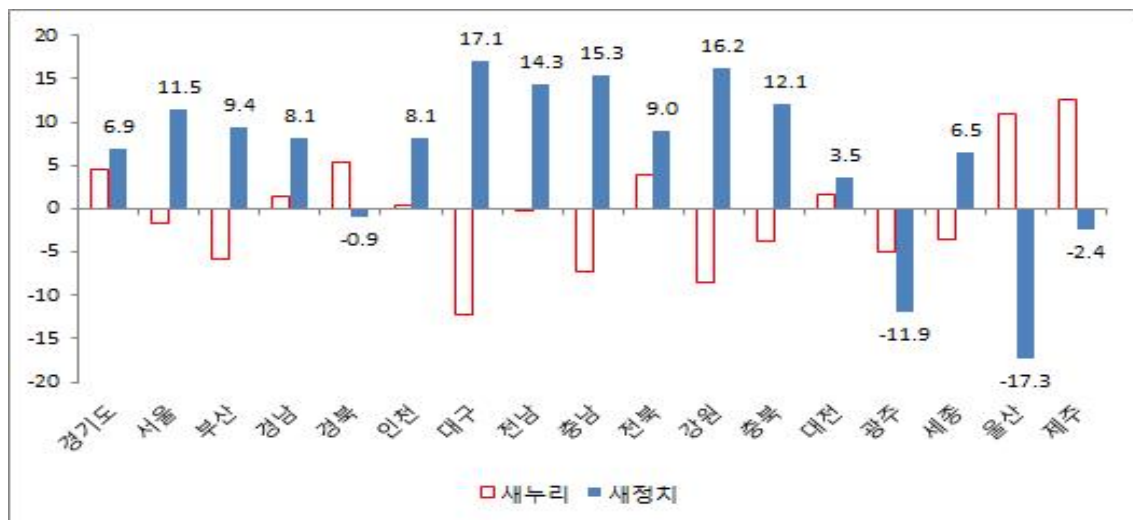
그림 3) 낙선자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 비교



각주: 정당지지율은 광역비례득표율

반면 새누리당 후보는 개인 득표율이 낮다. 양 당 후보의 득표력을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그림4) 후보자 득표율과 당지지율 격차: 새정치-새누리 비교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이긴 부산, 대구에서 당지지율보다 후보 득표율이 낮았고 인천 0.3%, 경남 1.4%, 경기 4.6%, 경북 5.4%에 불과하다. 결국 새누리당 후보들은 당지지율에 힘입어 당선되는 정당선거·조직선거를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당지

지을 보다는 개인의 인기나 능력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첫째, 개인의 인기와 능력에 의존하는 선거는 정당활동, 원내활동을 약화시키고 지역구활동, 후보개인의 활동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뢰받는 야당,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당-후보 간의 괴리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급적 정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의 강령 및 정책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내건다거나, 당은 원거리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다면...이미 나타나고 있다.

셋째, 총선과 대선은 개인의 인기와 능력만으로는 어렵다. 당의 브랜드와 파워가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경험했다.

따라서 후보 개인의 선전 조차 “실패의 구조화”를 구성하는 요인일 수 있다. 후보 개인의 선전을 정당 지지로 이어내지 못한다면, 정당-후보 간의 괴리를 넘지 못한다면 향후 선거에서 진다.

### 3.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여당의 선전

2010년 지방선거 대비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의회 및 광역비례에서 약간의 선전을 했을 뿐이다.

그림 5) 2014년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여야의석수 증가율(2010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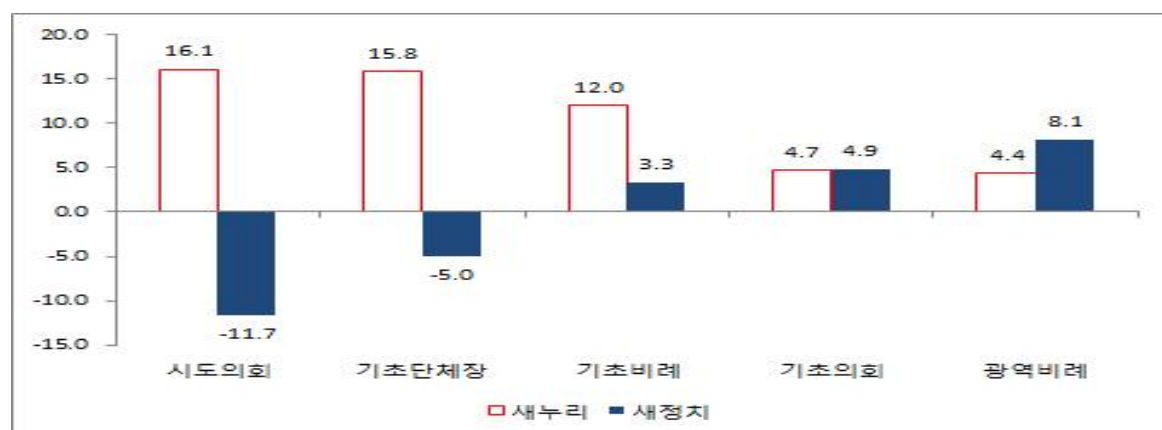


표 1) 광역·기초의석수 여야 비교: 2011년 지방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       | 총의석수        | 정당      | 2010(의석, %) | 2014(의석, %) | 증감율   |
|-------|-------------|---------|-------------|-------------|-------|
| 기초비례  | 376/379     | 새누리     | 160(42.6)   | 207(54.6)   | 12.0  |
|       |             | 여권전체    | 190(50.5)   | 207(54.6)   | 4.1   |
|       |             | 새정치민주연합 | 154(41.0)   | 168(44.3)   | 3.3   |
|       |             | 야권전체    | 186(49.5)   | 172(45.4)   | -4.1  |
| 광역비례  | 81/84       | 새누리     | 36(44.4)    | 41(48.8)    | 4.4   |
|       |             | 여권전체    | 41(50.6)    | 41(48.8)    | -1.8  |
|       |             | 새정치민주연합 | 32(39.5)    | 40(47.6)    | 8.1   |
|       |             | 야권전체    | 40(49.4)    | 43(51.2)    | 1.8   |
| 기초단체장 | 228/226     | 새누리     | 82(36.0)    | 117(51.8)   | 15.8  |
|       |             | 여권전체    | 97(42.5)    | 117(51.8)   | 9.3   |
|       |             | 새정치민주연합 | 92(40.4)    | 80(35.4)    | -5.0  |
|       |             | 야권전체    | 95(41.7)    | 80(35.4)    | -6.3  |
| 시도의회  | 680/705     | 새누리     | 252(37.1)   | 375(53.2)   | 16.1  |
|       |             | 여권전체    | 292(42.9)   | 375(53.2)   | 10.3  |
|       |             | 새정치민주연합 | 328(46.5)   | 309(43.8)   | -11.7 |
|       |             | 야권전체    | 352(51.8)   | 310(44.0)   | -7.8  |
| 구시군의회 | 2,512/2,519 | 새누리     | 1,087(43.2) | 1,206(47.9) | 4.7   |
|       |             | 여권전체    | 1,206(48.0) | 1,206(47.9) | -0.1  |
|       |             | 새정치민주연합 | 871(34.4)   | 989(39.3)   | 4.9   |
|       |             | 야권전체    | 1,001(39.8) | 1,036(41.1) | 1.3   |

각주: 무소속은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년도

그림 5와 표1에 따르면 여당은 시도의회에서 16.1%, 기초단체장 15.8%, 기초비례에서 12.0% 의석수 증가율을 보였다. 기초의회와 광역비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절대 비중에는 새누리당이 더 높다. 광역단체장과는 사뭇 다른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역자치단체장은 개인의 능력이나 인지도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 당지지율-정당활동-조직선거가 승패를 좌우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역과 기초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장 패배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패배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실패의 구조화가 여기서도 보인다.

여기서 또 질문, 국민은 야당과 여당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다. 국민은 후보 개인을 선택했고 정당으로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후보 개인에 대한 선택을 야당 선택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후보들이 각자도생을 위해 개인 인지도 상승에 주력한다면 야당과 후보 간의 괴리는 더 커진다.

#### 4. 프레임도 정책도 컨트롤타워도 없는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존재감이나 역할의 취약은 세월호 프레임 부재에서 두드러진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눈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후 “도와주세요”라는 읍소전략을 펼쳤다. 선거를 박근혜 대 야당후보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를 이 정도로 방어한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선방(혹은 승리)이다. 때문에 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 “조용히 있어라”, “대통령의 눈물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유탄을 맞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또한 당대표 조차도 관심지역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정책이 정확하게는 세월호 반응, 세월호 대책, 세월호 정책이 야당에게 없었다(무상급식과 같은 이번 지방 선거 특유의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 의원은 말한다. “경악, 분노, 비판은 시민의 몫일 수 있다. 하지만 결심, 전진, 성취는 정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야당이 고민하고 천명해야할 대책(과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슬로건 만이 아니다. 행태나 행동 역시 하나의 정책이나 대책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대표가 진도에 머무르며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요구하고 대책을 세우게 하고 나머지 의원 및 당원들이 선거를 뛰었으면 어땠을까?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천막농성까지 했던 야당이다. 이런 야당이 왜 세월호 참사에서는 숨죽였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많이 반성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매우 뚜렷했다.

지방선거의 성격상 광역단체장 선거캠프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해도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선거이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선거라면 당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누가 관장하는지 알 수가 없는 선거였다.

더군다나 프레임이나 정책, 컨트롤타워는 데이터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은 아

예 없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프레임이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이미 선거 이전에도 당의 심각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일은 합당하여 당명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무공천논란, 기초연금안 문제, 강령정책 논란(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정쟁의 대상이어서 정강정책에 넣기 곤란하다 등)은 합당의 효과를 순식간에 없앴다. 특히 이 사안은 지도부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당의 정체성마저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 이것과 정책부재나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선거기간 동안의 문제는 연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 5. 그래도 여전히 남는 질문

좀 더 고민하고 평가해야할 대목이 있다.

첫째, 경기와 인천에서의 패배는 무엇 때문인가?

인천의 송영길 후보는 개인 득표율이 당 득표율의 8.1%를 상회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인득표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적지않은 득표를 한 셈이다. 이것은 개인 득표율이 당 득표율의 6.9%를 상회한 경기도의 김진표 후보에게도 해당된다.

새누리당이라면 모를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도의 개인득표력으로 승리하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당의 무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승리한 유정복은 인천출신이 아니라 김포출신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및 새누리당과 동일시됨으로써 인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인천지역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고작 0.3% 더 얻었지만 이겼다. 박근혜 대 야당이라는 세월호 프레임의 성공이라 할 것이다.

경기는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 어느 곳보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책임을 묻는 선거가 필요했다. 후보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할 지역이다. 당은 무엇을 했는가? 인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아니면 후보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을까? 정확하게 평가할 대목이다.

둘째, 강원과 대전·충청의 선거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 총수      | 새누리     |      |       | 새정치  |      |       |
|----|----------|---------|---------|------|-------|------|------|-------|
|    |          |         | 2010    | 2014 | 증감(율) | 2010 | 2014 | 증감(율) |
| 강원 | 기초단체장    | 18      | 10      | 15   | 5     | 4    | 1    | -3    |
|    | 광역, 기초의원 | 211/213 | 126     | 141  | 15    | 59   | 54   | -5    |
| 대전 | 기초단체장    | 5       | 1(4)    | 5    | 4     | 1    | 1    | 0     |
|    | 광역, 기초의원 | 85      | 12(55)  | 36   | 24    | 30   | 49   | 19    |
| 충북 | 기초단체장    | 12/11   | 3(6)    | 6    | 3     | 5    | 3    | -2    |
|    | 광역, 기초의원 | 162     | 52(71)  | 100  | 48    | 77   | 52   | -25   |
| 충남 | 기초단체장    | 16/15   | 4(11)   | 9    | 5     | 3    | 5    | 2     |
|    | 광역, 기초의원 | 218/209 | 60(156) | 129  | 69    | 54   | 69   | 15    |

강원과 충북의 경우 광역의원 및 기초는 무너졌다. 그런 점에서 후보 개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새누리당의 확장과 비교할 때 현상유지 수준이긴 하지만 최소한 마이너스 의석은 아니다. 그렇다고 당 지지도와 연결될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안희정)대망론, (박근혜)실망론 등이 결합되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평가와 소감을 청취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통한 분석까지 반드시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

셋째, 우향우 혹은 중도화 전략은 성공했나?

경기, 충청, 대구, 부산 등에서의 선거는 중도화 전략의 논쟁을 내재하고 있다. 이 역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짧은 글로는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 다만 결론만을 말하자면 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중도화 전략은 가능하다. 새누리당도 보수적인 정체성에 입각하여 개혁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가. 어찌보면 당연한 결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향우 혹은 중도화 전략, 즉 정체성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야당의 무능력이나 야당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 또한 야권 전체의 능력이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야권전체의 줄어든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과거와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개혁세력은 겸손하다, 개혁세력은 따듯하다, 개혁세력은 더 소통하며 개혁세력은 더 성실하다 등등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를 물었던 박원순, 개혁후보는 겸손하다는 평판을 들은 안희정의 사례처럼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일신해야 할 것이다.

## 6.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혹자는 현상이나 원인은 알지만 대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 현상이나 원인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당내에서 생각의 공유와 소통이 점점 더 어렵다.

계파 때문이라고? 아니다. 과거의 계파라도 있다면 이처럼 당이 무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탄의 목소리도 있다. 지금은 계파가 아니라 그냥 친소관계나 인맥일 뿐이다. 계파는 무너지고 대안세력은 없는 황폐함, 이도 저도 아닌 무력감,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다. 이도 저도 아닐 경우 당원이나 의원은 각자살기에 나선다. 지역구 활동과 지역 선거에 올인 한다. 개인의 이해에 더 민감해진다. 혹은 과거의 명망이나 인지도를 갖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소통과 공유는 더 어려워진다. 당내가 이러한데 시민과의 소통과 공유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때문에 첫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이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 다르다. 단기필마의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내 외의 지지도가 높은 일부 의원과 이번에 선전한 후보군을 엮어낼 수 있는 리더십, 당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리더십, 개인적 이해나 지역적 이해보다는 시민 전체의 보편적 이해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능이 가능한 리더십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자와의 연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적인 전략단위가 있어야 한다. 6.4지방선거 평가를 넘어서서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을 짤 팀이 필요하다. 이 팀은 최소한 데이터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개인별 지역별 주먹구구, 내가 선거만 10번 해봤는데 라는 경험에 기초하기 보다는 객관성, 과학성 그리고 전문성이 어울어지는 전략단위여야 한다. 또한 지도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도부 자체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 전부터, 혹은 합당 전부터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에서 질 것이라는 예언, 그것이 운명이라는 신호가 이렇게 뚜렷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 토론회의 참여 역시 운명을 넘어서기 위한 치열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것이 집단적인 분투, 당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다. ㉠

##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1. 세월호와 지방선거 평가

-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쟁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며, 사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여러 과제 중에 하나를 정치권이 정책쟁점으로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야권 또는 진보의 실력이 보여주는 좋은 예
-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먹힌 이유도 야권이 앵그리맘 등의 대중적 분노 정서에 편승하는 것에 그치고, 세월호 참사에서 추출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을 가동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
- 세월호 참사가 이준석 선장과 유병언 전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정부조직개편과 관피아 척결로 왜소화되도록 방치하는 한편 그 주도권을 고스란히 여권에게 넘겨버린 책임도 야권, 진보에게 있다고 생각
-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17곳 중 13곳에서 승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야권 또는 진보진영이 대중적 열망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데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

## 2.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권/사회세력이 성찰해야 할 부분

- 야권이나 진보진영은 정치/도덕적 이슈를 중심으로 찬반구도를 조성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우열구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히 미숙
- 대중이 손에 잡히도록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쉽고 간명한 정책쟁점'인데, 여야의 정치공방을 통해서 이런 정책쟁점을 만들어내는 데 소홀하거나 무능함 표출
- 박원순 후보, 최문순 후보, 안희정 후보의 선전에서 보듯 진보는 거대담론을 버리고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의 정치에 주목해야 하고, 포용적 품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
- 이들 3인의 후보는 진보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진보 대 보수의 틀을 넘어서는 포용성의 스탠스로 승리했다고 생각
- 폴 크루그만이 <진보의 양심>에서 미국 진보의 당면과제를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제시했듯이 이제는 진보가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치적 양극화,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선제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구도가 세월호 참사보다 선거에서 더 큰 소구력과 동원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대형 사건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기계적으로 누리는 것으로는 견고한 보수연합에 균열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
- 사실 야권이 총선과 대선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선을 운영한 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과거사 논쟁 등 정치도덕적 프레임에 매몰됐기 때문

### 3.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치세력(정당)의 발전은 같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사실 시민운동은 선거에서의 역할보다는 평상시의 일상정치에서 어젠더 세팅과 대중적 에너지의 표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듯
- 시민사회가 각 부문별로 각자의 어젠더와 이슈를 갖고 있으나 의견그룹(advocacy group)이 아니라 대중적 기반을 갖는 결사체로 가야하지 않을까
- 시민사회가 단기적 동원보다는 차분하게 우리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진보의 시대담론을 개발하고, 대중화하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 4. 진보개혁적 운동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집중해야 할 활동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활동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진보개혁적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구조적 지형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정치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해 언제 어디서나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의 조직화 및 정치적 역량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기초연금법 등에서 전술적 후퇴에 양양불락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정치개혁이 가져온 자해적 효과를 감안하면 정치와 노동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당분간 선거제도 개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건 결정적 요소
-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할 정도의 고민이나 경험이 없어 생략하고, 다만

어떤 어젠더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대중적 언어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

- 끝으로, 시민운동이 정당의 결정을 과도하게 제약하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으며 결국 정치과정의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 [\[참\]](#)

## 마을에서 바라본 고민과 바람

---

백해영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진화의 다른 이름은 분화이고 복잡성과 구조화가 증가하므로 어떤 사안에서든 그 작용요인과 해법을 쉽게 진단할 수가 없다. 명확한 것을 잡아내기보다는 아닌 것을 골라가는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싶다. 어떤 것이 보다 더 적절한지 어떤 사회가 더 인간다운지 궁구하고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가다보면 보다 신뢰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 1. 고민

1) 진보와 보수는 깊이의 차이라기보다는 위치성의 차이이다.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중심에 둔 자유주의적 관점인가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 하는 차이이다.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 공존, 장점의 최대화를 중심에 두고 통합해가는 것이 진보이지 않는가. 분단의 극복, 분열의 치유, 단절의 이어감, 호혜적 관계망이 진보다.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영역에서 대상이었던 시민이 참여의 대상에서 주체로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왔다. 기획, 계획, 실행단계에서 몇몇 자문의 형태로 의견을 듣는 정도이므로 시민참여의 한계는 여전하다. 민원인, 자문참여, 무대아래 박수부대, 투표하는 사람, 시민사회와 자원활동 등의 사회적 참여(인 한에서만 환영) 등의 참여의 시대를 지나 직접 자신의 아쉬움을 자신이 해결하고 무대에 오르려는 시기이다.

3) 시장과 국가 영역의 비대화 생활세계의 해체-산업화와 경제성장, 기술과학, 사회·정치적 제도의 급속하고 폭발적인 진보는 ‘나’와 ‘우리’ 영역에서의 진보를 무색하게 만들고 의식과 도덕을 한꺼번에 쓸어냄. 이웃과 관계가 해체되고 나와 이웃의 생활의 아쉬움을 국가와 시장에서 해결.

4) 고비용 위험사회에서 저비용 안전, 안심사회의 자원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5) 위임과 대리의 한계, 시민사회 감시와 비판기능 역량의 약화-‘시민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나를 뽑아달라. 시민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라’

6) 시민사회 혁신의 필요-시민사회(시민사회단체) 또한 위임과 대리의 기능중심. 집중화, 전문가 중심, 회원은 소극적 참여와 회비납부자. 지역 시민단체는 비판기능과 교육, 육아, 문화, 다양한 커뮤니티형성의 두 기능 수행해옴.

공통점은 중심화와 백화점화. 사무국 중심성, 사무국에서 기획, 집행하고 회원은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자기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시민

1)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자치(self-government)력 강화

아쉬움을 갖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고용가능성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생활의 보장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려 노력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나 협동조합 등의 중간단체에 의한 자기통치력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의 강제적이고 비인칭적인 연대에서 보다 인칭적이고 자발적인 연대, ‘얼굴이 보이는 연대’로 가능-마을의 부상

2) 수혜자, 민원인 -> 주체로

3) 공공의 재구성

- 공공, 공공성, 공공의식의 빈곤함을 넘어서자.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무경계
-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공공자원의 관리, 책임, 공공의 담론과 확장 등의 주체는

결국 시민

4) 당사자성과 작은 단위들

5) 전문가가 지원자로, 인큐베이팅자원의 확대

### 3.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을

1) 마을공동체

- 주민 스스로 돌봄, 문화, 경제, 주거 등 자신의 생활상의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
- 자조적 돌봄관계망, 문화의 생산자, 협동의 경제(시혜, 소비자, 고비용과 경쟁의 경제를 넘어)
- 주체는 주민이고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지원자
- 당사자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2) 배경

- 국가와 시장의 비대화, 생활세계(규범, 도덕, 문화)의 빈곤함을 해소할 방안
- 양극화와 갈등의 증대-생활세계도 같다.
- 해체된 관계망 속으로 들어온 자본, 혹은 관계를 해체함으로서 성장가속을 하는 자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대량생산, 대량소비 <-> 공유경제
- 간접민주주의 한계와 직접 민주주의 욕구의 성장

### 4. 6·4선거의 경험

- 무공천제의 불이행과 묻지마투표
- 다양성의 퇴행은 죽어가는 정치라는 것을 반증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의 실험모색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라운드테이블]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발행일** 2014. 6. 10.

**발행처** 참여연대 · 참여사회연구소

**담 당** 이송희 간사 02-725-7105 pp@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